

세르비아-몬테네그로(Serbia and Montenegro)

(2004. 2)

국별조사실

面積	10.2만 km ²	貨幣單位	YuD
人口(2003)	10.7백만 명	환율(2003)	YuD 57.65/USD
GDP(2003)	196억 달러	會計年度	1. 1~12. 31
1人當GDP(2003)	1,159달러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e	2004f
경제성장률	5.0	5.5	4.0	1.5	3.0
소비자물가상승률	69.9	91.0	21.3	11.2	6.2

□ 왜곡된 경제구조

- 2001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GDP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 등의 1차 산업도 24%에 이르는 전근대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난 1990년대 반복된 전쟁,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동국은 해외자금 유입이 부진하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성과도 극히 낮았음. 여기에다 1999년 NATO의 공습으로 인프라와 제조업 시설 파괴로 제조업도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개혁정책 적극 추진

- 세르비아 공화국의 재정상태는 기대 이상의 민영화 수입, 조세징수 실적

개선, 활발한 해외원조자금 유입 등으로 호전되고 있음. 동국 정부의 2002년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GDP의 4.3%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2003년에도 GDP의 3.4%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여 이런 개선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몬테네그로 공화국은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성장세 둔화

- NATO 공습의 여파로 1999년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한 후 4%~5%대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2003년에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농업과 제조업의 부진을 상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의 저성장세에 그침.
- 2004년의 경제성장률 또한 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불안한 정치상황, 공공자금 유입부족, 민영화 지연으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등이 그 주요 요인임.

□ 물가상승률 뚜렷한 둔화추세 유지전망

- 2003년의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긴축재정정책과 공공부문 임금상승 억제 등이 효과를 나타내어 2002년(21.3%)의 절반 수준인 11.2%를 기록하였음. 당분간 IMF의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에는 7.6%, 2005년에는 6.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나. 국제경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e	2004f
경 상 수 지	-339	-528	-1,746	-2,416	-2,100
경상수지/GDP	-3.9	-4.6	-11.1	-11.3	-8.9
상 품 수 지	-1,788	-2,834	-3,908	-4,843	-4,700
수 출	1,923	2,003	2,412	2,667	3,200
수 입	3,711	4,837	6,320	7,510	7,900
외환보유고	524	1,169	2,280	3,550	n.a.
총외채잔액	11,725	11,740	11,800	14,000	n.a.
총외채잔액/GDP	136.3	102.1	75.2	70.7	n.a.
D. S. R.	3.2	2.4	10.1	8.9	n.a.

자 료 : EIU Country Report.

□ 주요 교역대상국은 이탈리아와 독일

- 2002년도 주요수출국은 이탈리아와 보스니아로 각각 총수출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이 10%를 기록하였음. 최대수입국은 독일로 13.1%이며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12.5%와 10.3%임.
- 그러나 수출용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동국의 상품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노동자 송금 등의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상품수지 큰 폭의 적자 지속

- 지난 1990년 약 41억 달러 규모였던 동국의 수출은 계속되는 전쟁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1999년에는 16억 달러 수준으로 위축되었으나 그 이후 증가기조를 유지하여 2003년의 수출은 2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수입 증가세가 이를 크게 능가하여 동국의 상품수지는 1999년의 -16억 달러 수준에서 2003년에는 -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동국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상품수지 적자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해외로부터 근로자 송금 및 원조자금 유입과 발칸지역의 교역환경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관련된 수출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3년의 22억 달러 규모에서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됨.

□ 민영화의 영향으로 FDI 유입은 증가

- 세르비아 정부는 2003년의 FDI 유입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의한 유입으로 보이며 미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임. 동국은 발칸반도의 중심이라는 지역적인 장점과 우수한 노동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

- EU는 2003년 6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의 5개국에, 2003년 중 2억1천만 유로(미화 2억4천900만달러) 원조에 이어 2004-2006년에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가로 2억유로를 제공키로 약속하였음.
- IMF는 2002년 3월, 3년간 6억 5,000만 SDR(9억 2,900만 달러)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연합정부는 EU와 안정화 및 제휴협정(Stability Association Agreements : SAAs)을 2004년 내에 조인할 예정이나 兩 공화국간 농업과 관세등의 분야에서의 합의가 선결조건이며 최근 세르비아 내에서 보호무역론자들이 반카 바디나이 자우르예의 재규제야 하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음

2. 정치 · 사회동향

□ 유고연방에서 세르비아-몬테네그로로 재탄생

- 밀로세비치 축출 이후, 세르비아와 함께 유고연방을 구성하고 있었던 小國인 몬테네그로가 연방 탈퇴와 독립을 추진하고 나서자 발칸지역 국경의 변화를 원치 않는 EU의 중재로 兩 공화국은 느슨한 형태의 연방인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 유고슬라비아연방 의회는 2003년 2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연방을 해체하고 느슨한 형태의 새 국가연합을 창설하는 내용의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지난 1992년 창설된 유고연방은 사라지고 세르비아-몬테네그로라는 국가연합이 탄생하였음.
- o 새 헌장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 두 공화국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할 합동행정기구로만 연결되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 관계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 완전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국제적으로는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에서 하나의 의석을 가지는 단일실체이며 현행 조약과 협정에 대한 유고연방의 권리와 책임도 승계하였음.

□ 세르비아는 민족주의 정당이 부상

- Vojislav Kostunica 총리가 이끄는 세르비아민주당(DSS)과 민주당(DS), 세르비아 혁신당(SPO), G17 Plus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2003년 11월 세르비아 총선에서 극우 민족정당인 세르비아급진당(SRS)이 27% 이상의 득표율로 제1당을 차지하였으며 현재 전범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슬라브 세셀리가 이끄는 SRS의 급부상에 따른 극우 민족세력과 온건 민주세력간의 치열한 정쟁이 예상됨.

□ 몬테네그로는 사회민주당(DPS)이 강세

- 2003년 1월 DPS 소속으로 연방분리파인 밀로 듀카노비치 前 대통령이 신임총리로 선출되었고 2003년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DPS)의 필립 뷰야노비치 前 총리가 승리하였음.
- o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지지하는 뷰야노비치 대통령은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에 실시된 두 차례의 대선에서도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두 차례의 선거 모두 유효 투표율 50%를 밑돌아 무효 처리되었음.

- 류야노비치 대통령은 현 연합에서의 독립을 핵심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몬테네그로의 많은 유권자들이 인구나 영토면에서 훨씬 큰 세르비아와의 관계가 단절돼야 몬테네그로가 정치·경제적으로 더 번영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 o 세르비아는 몬테네그로보다 영토가 6배가 넓고 인구는 몬테네그로가 65만명, 세르비아가 천만여명임.

□ 기타 요인

- 1999년 6월 NATO와 구유고연방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코소보 분쟁은 종식되고 평화유지군이 코소보에 진주하고 있으나 동 지역에서 간헐적인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2001년 마케도니아 사태시에도 알바니아계 반군의 주력은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반군출신이었으며 이들이 몬테네그로의 알바니아계 반군들과 연계하여 투쟁할 경우 발칸반도에서 다민족간의 연계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2003년 10월 세르비아 정부와 코소보 알바니아계 양측이 지난 99년 코소보전쟁이후 처음 가진 직접 회담은 코소보 독립을 둘러싼 의견대립 끝에 결렬되었음.
- 전후 코소보는 정부와 의회의 힘이 제한되고 유엔 행정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코소보는 계속해서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세르비아 지도부는 코소보에 대한 통치권 회복을 원하고 있음.

3.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7등급(2003.1) → 7등급(2004. 1)
- o I.C.R.G: 134/140(2003.1) → 129/140(2004. 2)
- o I. I: 124/151(2002. 9) → 144/172(2003. 9)
- o Euromoney: 129/185(2002. 9) → 136/185(2003. 9)

o Moody's, S&P, Fitch : 등급 없음.

- 2001년 11월 유고연방은 파리클럽과 원금의 66% 탕감, 나머지는 6년의 거치 기간 포함 22년 상환조건의 리스케줄링에 합의하였음.
- 유고연방 기업들의 세계은행에 대한 채무 17억 달러도 양호한 조건으로 리스케줄링에 합의하였음.

4. 요약 및 전망

□ 정치적 불안 상존

- 2000년 밀로셰비치 체제 붕괴 이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합으로 재탄생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정상화 기대가 높으나, 코소보 문제와 알바니아계의 소요사태등을 비롯하여 이 지역에서의 인종간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어 동국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우려요인이 되고 있음.
- 200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몬테네그로의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가 독립으로 결정이 날 경우 세르비아와의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兩 공화국 내의 정치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여전

- 밀로셰비치 체제 붕괴로 동국은 서방 세계와의 관계정상화 및 막대한 경제지위의 혜택을 얻고 있으나, 밀로셰비치 송환에서 보듯이 서방세계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게다가 동국은 미흡했던 체제전환 노력으로 인해 아직도 경제구조상 많은 취약점과 광범위한 경제 구조조정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동국은 거시경제 관리상 문제나 해외원조 및 FDI 감소가 나타날 경우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기 타>

가.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수립 : 1989. 12. 17(북한과는 1971. 9. 2 수교)
- 주요협정체결 : 항공운수협정('91)
- 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2001	2002	2003	주요 품목
수 출	11,157	10,923	26,752	수송기계,석유화학,전자제품,직물
수 입	63	150	329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 2004년 1월.